



미국 법무부

민권국

법무차관
950 Pennsylvania Ave, NW - RFK
Washington, DC 20530

민권 담당 법무차관 Eric S. Dreiband의 성명서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 질병(COVID-19) 대응 시국에 따른 민권 보호**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 질병(COVID-19)과 관련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비추어 미국 법무부의 민권국은 불법 차별의 희생자들이 민권을 침해 당할 시 민원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인종, 성별, 종교, 출신국, 장애 및 기타 보호 계층에 기반한 차별은 여러 연방법상 불법이며 형사 또는 민사 책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 제시된 예들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justice.gov/crt/page/file/921291/download>. 또한, 이들 및 기타 보호 계층을 구실로 행사하는 증오로 인한 폭력 행위는 연방 증오 범죄 법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참조하십시오: <https://www.justice.gov/crt/hate-crime-laws>. 차별은 교육, 고용, 보건 및 안전, 주택, 공공 시설을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에 대한 세계적 대응이 계속되는 이 때, 법무부는 민권 법들을 집행하는 데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 성별, 종교, 출신국, 장애 또는 기타 보호 계층을 이유로 두려움 및 편견 때문에 주택, 학교, 혜택, 서비스, 직장 및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과 가족 및 지역사회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비상사태와 보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 계층에 대한 폭력 행위 또는 위협을 포함하여 불법적인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비상사태에서처럼 COVID-19 발병은 여러 다양한 인종, 종교 및 민족성 및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법적인 차별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은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집행될 것입니다.

인종, 성별, 종교, 출신국, 장애 또는 기타 보호 계층에 기반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justice.gov/crt/how-file-complaint> 및 <https://www.justice.gov/crt/fcs>. 고용 차별에 대한 고발은 EEOC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eoc.gov/employees/charge.cfm>. 또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855-856-1247 또는 202-514-3827로 민권국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권국은 <https://www.ada.gov>(장애 관련 주제) 및 <https://www.lep.gov>(언어 이용 정보)에서 자원을 제공합니다.

인종, 성별, 종교, 출신국, 장애 또는 기타 보호 계층을 이유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현지 FBI 현장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현장 사무소 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fbi.gov/contact-us/field-offices>.

연방 정부 내 다른 기관들과 더불어 미국 법무부의 민권국은 COVID-19과 관련된 민권 문제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justice.gov/crt/fcs 에서 참조바랍니다. 연방 정부의 COVID-19에 대한 대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백악관: 미국 코로나바이러스 가이드라인](#) 및 www.coronavirus.gov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침 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법령에 의해 명확히 승인되거나 계약, 승인 또는 협력 협정으로 명확히 통합되지 않는 한 법적 강제력 및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행정 명령 13891 및 관리예산실 이행 각서에 준하여, 법무부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목적을 제외하고 법무부의 안내 포털 또는 기타 행정부 부서 및 기관들을 위한 유사한 안내 포털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지 않은 일체의 지침 문서를 인용, 사용 또는 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침 문서가 자발적인 기준(예: 권장되는 관행)을 명시하는 한, 그 기준들에 대한 준수는 자발적이며 비준수로 인해 집행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지침 문서는, 해당 법률과 준하여, 법무부의 완전한 재량으로 폐지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